

최저임금 1만320원... 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

실업급여 월 최대 204만원... 최소 198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업무분담 확대... 복직 후 1개월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비수도권 계속고용장려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만30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0원(2.9%)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은 8만2560원이며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휴유 8시간 포함)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은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근로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도 강화된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학교 등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격 시행된다.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1일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현재는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사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렸다.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상한액도 인상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전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원청 기업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웠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쟁의가 가능해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이나 쟁의에 참여한 경우 및 정도, 손해배상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과 인건비 지원 예산이 복원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을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제도전환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평균 2000만~5000만원 규모로 차등지원하고, 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상시 제공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경우 월 50만~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최대 1년간 제공한다. 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매월 60만원, 그 외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하며,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3단계(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원)로 구분해 우대 지원한다.

뉴스시

쌀 수급 선제 관리 도입

축산·반려동물 부담도 낮춘다

쌀 과잉을 사전에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수급 관리 체계가 도입되는 등 농업 정책 전반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축산·반려동물 분야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정책 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쌀 과잉은 막고 소득은 보전...양곡 정책 대수술

정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라작물직물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수,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 용벼, 수수, 울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돼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축산·반려동물 정책도 변화...백신·방역·진료비 부담 완화

축산 분야에서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전면 도입된다. 기존 백신과 달리 감염 항체와 백신 항체 구분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가축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23일 시행된다.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한우 관련 정책 목표설정 및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발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용자 지원도 강화된다.

축사의 신·개축을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제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에 선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돼 사실상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은퇴한 군·경철검 등 국가보상동물을 입양할 경우 연 최대 100만원의 돌봄비용도 지원된다.

뉴스시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모든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 초3에 '방과후 이용권' 지급

내년부터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돌네 초등돌봄 도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반전 계기도 마련한다.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별도 신청 없이 '차감'

2026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 아동도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7월

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유아에 대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11만원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 내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어려움 조기 발견해 맞춤형 지원

내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원은 학생의 학습 참

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별로 분절적인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 중심 지원을 제공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학교 내 구성원은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사업 간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선 지능, 아동학대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층적 어려움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신청 가능...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은 후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학부생은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했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8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하나, 9구간 중 긴급생계관련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스시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